

반부패 교육에 대한 고찰*

A Study on Anti Corruption Education

김진영(Kim, Jin young)**

ABSTRACT

We know corruption is a crime which incurs cost both individual and society. Deterrence, prevention and education are three major measure for fighting corruption. Among them, education is emphasized very powerful and effectiv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UN, OECD, and Worldbank has emphasized importance of education as an anti corruption measure.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wofold. First, I looked into anti corruption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 and found that the effect of anti corruption education could be large when it is practiced in the citizenship education or social studies education. Second, The direction of anti corruption education should be that individuals know and understand the cost and benefit of their corruptive behavior correctly. Although individuals try to decide rationally, their decision is constrained by the bounded rationality. Anti corruption education, therefore, should remind individuals of even higher true cost and much smaller benefit of corruptive behavior.

Key words: Anti Corruption Education, Citizenship, Behavior Change, Benefit, Cost

I. 서론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국내적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패 현상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OECD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로 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패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한편 국내에서도 새로운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수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가 수반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부패현상이 만연한 인상을 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나 보조금이 많아지고 또한 국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증가하면서 이런 국가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것이 더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부패의 절반이상이 국가 보조금의 불법수령이라고 한다.(서울신문, 2014-11-6)

부패의 비용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다양하다. 부패는 사회의 자산

* 본 연구는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과제번호-120140137)

** 강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나 부를 부패한 공무원에게 이동시키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만 보면 사회가 소유해야 할 것을 단순히 부패한 공직자에게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분배의 정의는 무너지지만 효율성을 해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를 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부패를 막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는데 이런 노력들은 부패 행위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노력이다. 부패의 비용은 이런 경제적인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패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효율성의 침해와 같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 부패는 기관이나 제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망가뜨려서 기관이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더 넓게는 사회적 신뢰나 정치적 안정을 무너뜨려 사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복지부정 사례와 관련해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연구개발비 등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지출도 늘면서 각종 기금과 보조금이 누수 되는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정을 부정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정부 지원금의 환수와 징벌적 배상청구,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그리고 명단공개와 정부사업 참여금지와 같은 제도들이다.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부패행위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서 인권침해 방지 노력과 반부패 노력을 같은 범주로 보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범죄를 포함한 부패 행위의 원인은 심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것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과 사회 환경이나 경제적 인센티브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

Huberts(1998)는 부패의 원인과 결과를 결합하여 공무원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부패의 경제적 가치를 낮추고 부패에 따른 처벌의 비용을 크게 하는 방안으로 공무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높여주는 것, 부패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공무원 문화 조성, 감사나 감시와 같은 내부 조직의 통제시스템 강화, 권력분립, 기관독립,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와 같은 정치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교육을 들고 있다. 부패는 크고 작은 것 그리고 우발적인 것과 의도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조직적인 것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동기나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도 전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3가지 전략은 방지(deterrence), 예방(prevention) 그리고 교육(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 활동에서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홍콩의 반부패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도 부패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부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은 일찍부터 주목 받아왔고 교육 대상과 방법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반부패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규의 학교 교육 속에 포함시켜서 반부패 교육을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반부패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 교과목에서 법의 준수, 시민의 책임, 정의로운 삶과 같은 주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반부패 교육의 사례들을 알아보고, 반부패 교육의 원리에 비추어서 효과적인 반부패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글의 두 번째 장에서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반부패 교육 사례들을 찾아본다. 이어서 세 번째 장에서는 반부패 교육의 원리를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모형에 따라서 탐구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상의 사례와 논의를 근거로 효과적인 반부패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은 요약과 정리를 담고 있다.

II. 반부패 교육 현황

1. 학교 반부패 교육

교육은 공공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예산은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 교육은 인권의 기본적인 항목이면서 개인 사회 경제발전의 중요한 매개물이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존엄성을 가진 삶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교육을 통하여 미래세대 즉 어린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른바 정치사회화(politicalization)를 통하여 그 국가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할 공통의 가치나 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교육, 환경교육, 학교폭력교육, 건강교육과 같이 더 한정된 목표를 가진 교육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학교교육은 여러 교육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학년별 학교급별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내용의 범위나 깊이를 달리하여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목표) 학교 교육의 총괄적인 목표가 민주시민의 양성이지만 민주시민의 자질을 직접 교육하는 교과목은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과라고 할 수 있다.²⁾ 미국의 사

1) 한국의 경우 2014년 예산에서는 50.6조원의 교육재정은 전체 예산의 14%에 머무르지만 민간 부담 공교육비를 더하면 한국의 경우도 교육비가 국가 예산의 20%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2) ‘사회과’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도덕의 10대 교과목의 사회과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사회과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회과가 사회과학 분야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여기에 도덕과 윤리 교과목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의 4과목을

회과 교육협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tudies)에서도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책임 있고 유능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지식(knowledge) 기능(skill) 그리고 태도(attitude)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지식과 태도를 갖춘 시민은 세상에 대한 지식과 사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도덕적 시민적 덕목(moral and civic virtues)을 갖추어야 한다.³⁾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 교육은 근본적으로 반부패 교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과 혹은 시민 교육은 본질적으로 반부패 교육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 혹은 덕목에는 법과 규범의 준수, 정의, 공정, 성실과 청렴, 정치참여, 시민참여, 민주적 절차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은 자연스럽게 반부패 교육 내용이 들어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특히 민주시민 교육에 직접 기여하는 교과목들은 사회과 교과목으로서 세계적으로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 혹은 공민교육(civic education), 정치 교육 그리고 도덕 윤리 교과목이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이름 보다는 사회과 교육(social studies)이라는 이름으로 지리 역사 정치 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이 주로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과 교육이라는 이름이 매우 중의적으로 사용되는데 사회과 교과목 중에서 일반사회 영역과 도덕과 윤리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과 중에서 일반사회 교과목에서 반부패 교육이 용이하다. 정치교육은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원리를 주로 교육하는데 민주주의의 원리와 법 준수나 시민참여를 통하여 반부패를 용인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다. 법교육에서는 법의 준수 그리고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내용에서 반부패가 다루어 질 수 있고 경제학에서는 부패의 비용이나 부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과나 시민교육에 별도의 반부패 교육이 없지만 동유럽 홍콩 그리고 남미에서는 시민교육을 반부패 교육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⁴⁾

반부패 교육이 시민교육에 들어있을 때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정부의 역할, 권력분립, 법의 준수, 그리고 정부의 인권보장과 같은 맥락 속에서 공무원의 부패 문제가 설명될 때 학생들에게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부패의 비용이 공공기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국가나 사회체제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포함한다. 서구에서 시민교육이라 할 때는 한국의 일반사회 지리 역사 그리고 도덕 윤리 교과목을 포함한 교과목 교육을 의미한다.

3) 미국 사회과 교육협회의 홈페이지(<http://www.socialstudies.org/positions/powerful>) 참조.

4) 특히 유럽과 동유럽의 반부패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동유럽의 불가리아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독일의 베를린에 센터를 개설한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ERCAS)를 참조할 수 있다.

<http://www.againstcorruption.eu/projects/education-against-corruption/>

한편 윤리나 도덕 교과목 속에 반부패 교육이 들어가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행위 규범 속에 공무원의 부정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반부패 교육을 할 수 있다. 학교의 반부패 교육은 반부패를 설명할 수 있는 맥락을 가진 교과목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을 통한 반부패 교육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 홍콩과 미국을 들 수 있다.(Marquette, 2007). 주지하다시피 홍콩의 반부패 기구인 ICAC의 성공적인 반부패 활동은 잘 알려져 있다. ICAC에는 대민창구인 지역관계부서(Community Relations Department)가 있어서 반부패 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일과 반부패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홍콩의 반부패 교육은 별도의 반부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인 시민교육(civic education)에 반부패 교육을 포함하여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CAC가 시민교육에서 반부패 교육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학교의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교육에서 한 역할은 매우 적은 부분이다. 홍콩은 시민교육지침서(Guidelines on Civic Education in Schools)에서 민주적 가치, 비판적 의식, 시민의식 그리고 권리와 의무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덕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⁵⁾

길러야 할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

시민 의식
 법의 지배 이해
 정치적 성장, 이익, 의식
 정치적 무관심 해소
 중국에 대한 인식전환
 국민의 정체성
 국민적 금지와 애국심
 중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알기
 한 국가 두 체제의 이해

홍콩의 ICAC가 시민교육에서 한 조그만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을 통한 반부패 교육의 성과는 놀랄만한 것이다.

미국은 일찍부터 시민교육이 성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권리,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경제를 위하여 의무교육을 통하여 시민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독립 당시부터 강조하였다. 이후에도 외국으로부터 유입하는 사람들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통하여 애국심 정체성 문화 동화 현상(acculturation) 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2년 단순한 시민교육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회과 교육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시민적 유능성(civic competency)을 강조하는데 시민적 유능성이란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주시민으로서 공익(public good)을 위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5) Marquette(2007)의 논문 p243 에서 인용 번역함.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은 1997년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기 전의 시민교육 과정에서 추출한 것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말한다고 한다.⁶⁾

미국은 시민교육이나 사회과 교육을 통하여 사회통합, 시민의식 제고, 반부패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건국초기에는 시민의 자질로 카톨릭에 대한 신교 즉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을 강조하였지만 듀이(John Dewey)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과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이후에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교육이 강조되었다.(Carpenter, 2007). 민주주의에 필요한 선량한 시민 혹은 좋은 시민의 여러 자질에 대해서 짚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직(honesty)은 항상 빠지지 않는 중요한 시민의 덕목 혹은 자질이 되고 있다.⁷⁾

한편 캐나다에서도 시민교육과 반부패 교육을 통합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⁸⁾

- 정부기구의 기능과 절차
- 법의 지배
- 민주주의 좋은 시민과 좋은 통치의 가치와 태도
- 시민 참여

시민교육은 정부제도와 정부의 작동원리를 가르치고 대의제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어떤 경우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민들은 부패 행위가 개인적으로는 인권침해 행위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정부나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교육방법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비교과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시민교육에서 반부패 교육의 효과를 대부분의 실험연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중남미 6개 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 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속의 반부패 교육 효과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⁹⁾ 시민교육의 내용은 시민적 가치, 법존중, 민주적 기관에 대한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부패행위나 규정위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6) Marquette, H. and D. Mineshima(2002) 참조.

7) 미국 교육부의 시민교육 안내를 보면 동정심(compassion), 정직과 공정(honest and fair), 현명한 판단(good judgments), 절제와 수양(self-discipline) 타인 존중, 신념을 향한 용기, 책임감(responsibility), 애향심, 자기존중을 좋은 시민의 특성으로 들고 있다. 미국 교육부 웹 사이트 <https://www2.ed.gov/parents/academic/help/citizen/citizen.pdf> 참조

8) 세계은행(worldbank)과 캐나다의 맥길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 ‘의회와 부패’ 교육 모듈의 일부. <http://www.parliamentarystrengthening.org/corruptionmodule/> 참조.

9) 자세한 설명은 미주 개발은행의 웹사이트를 참고 할 것. <http://www.iadb.org/en/topics/transparency/support-for-countries/education-as-a-tool-against-corruption,6752.html>

2. 비교과 활동에서 반부패 교육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부패 교육은 사회과 교육이나 시민교육의 일부로 정규 교육과정
에 포함할 수도 있고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특별활동이나 비교과활동(extra
curricular activity)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시민교육에서 반부패 교육은 정치나 정부
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부패가 정부의 역할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부패 교
육이 용이하지만 부패의 속성이나 특징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내용을 설명하기가 적합
하지 않다.

이에 반해서 비교과 활동으로 부패 교육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패와 관련된 내용
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민교육에서 반부패 교육은 담당 기구가 교육부
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교과 활동에서 반부패 교육은 주로 반부패활동 전담 기구가
자료를 제작 전달하고 학교의 수업시간이나 별도의 캠프참가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된
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학교에서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면서 비교과 활동으로 반부패 교
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¹⁰⁾ 오스트리아의 반부패국(Federal Bureau of Anti
corruption, BAK)은 14-18세 사이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반부패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반부패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45분짜리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의식 수업과 역할놀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업의 끝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성과를 검사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부패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부패 현상의 원리 이
해, 반부패활동의 법적인 근거와 같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패 예방, 부패 투쟁에서 시민의 역할 이해, 경제활동과 도덕적 가치 사이의 관계, 윤
리적 기준 평가하기와 같이 부패와 관련한 가치, 의사결정,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반부패 교육 내용

부패의 개념 정의하기
부패 유형(상황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부패의 결과나 부패의 논리
부패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들
부패방지
부패방지를 위한 기구와 수단들

10)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유엔 범죄와 마약(United Nations Drug and Crime, UNODC)의
웹사이트
https://www.unodc.org/documents/treaties/UNCAC/WorkingGroups/workinggroup4/2013-August-26-28/Responses_NV/Austria_EN.pdf에 제시되어 있고 교육 결과에 대한 코거(M.
Koger) 박사의 평가는 유럽연합 실행위원회의 웹사이트에
(http://ec.europa.eu/anti_fraud/documents/anti-fraud-communicators-network-seminars/2013/martina_koger.pdf)의

다른 부패 교육과 달리 교육 내용 중에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부패 사례를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오스트리아 고등학교 반부패 교육에서 부패 사례

사례 : 선물 받는 행위

수지(Susi)는 품행이 좋지 못하고 수학과목에서 낙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지엄마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기로 하였다. 대화중에 엄마는 선생님께 값비싼 펜을 드렸다. 감독관과 철학 선생님도 동행한 상황이다.

질문 :

1. 각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2. 당신의 생각으로 이것은 부패로 간주될 수 있는가?
3.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적절한가?

학생들에게 부패현상을 개념부터 이해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절도나 강도와 같은 것들은 분명한 범죄행위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부패의 경우에 학생들이 부패라고 파악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패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치 탐구를 하도록 케이스 분석을 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 부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패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례를 통하여 부패 개념을 분명히 하도록 돕고 있다.

유엔에서는 지역별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의 반부패 교육은 원조를 많이 받는 아프리카 지역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동유럽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유럽 국가의 반부패 교육은 학교와 학교밖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¹⁾ 특히 청소년 반부패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2013년 11월 파나마에서 개최된 유엔의 반부패 컨퍼런스에 마케도니아(Macedonia)의 초등학교 반부패 교육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¹²⁾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비교과활동으로 이루어진 반부패 교육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부패현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수준의 아동들은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부패의 해로움을 인식하는데 적절한 인지 발달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부패 교육의 목표를 부패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부패가 인권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측정하는 간단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11) 동유럽 6개 국가의 반부패 기구인 지역반부패운동(Regional Anti-Corruption Initiative)에서는 다양한 반부패 운동을 펼치고 있다. www.rai-see.org/ 참조

12) 마케도니아에서 초등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교육이 성과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ttps://www.unodc.org/documents/treaties/UNCAC/COSP/session5/SpecialEvents/2013_11_25_VladimirGeorgievFYROM.pdf

마케도니아 초등학생 반부패 교육 내용

부패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부패는 부정적인 현상인가?
 부패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가?
 사회가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부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스스로 부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가?

이 밖에도 헝가리의 행정연구소는 반부패 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 현상을 도덕적 관점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¹³⁾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다음과 같은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헝가리 행정연구소 반부패 수업내용

부패란?
 도덕적 문제
 부패와 인권
 부패 방지
 부패와 시장경제
 부패와 법
 부패와 민주사회

반부패 수업과정이지만 이 내용들은 사회과나 시민교육 교육과정에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의 시민교육과 접목할 수도 있고 별도의 교과목으로 분리해서 가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 교육내용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부패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3. 한국 학교 교육과정상의 반부패 교육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도덕이나 윤리 교과목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별도의 도덕교과목이 존재한다.¹⁴⁾ 한국에서 도덕 교과목 역시 민주시민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 교과목의 일부이다. 2009 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교육과정의 도덕 과목은 존중, 책임, 정의, 배려를 지향하는 가치로 하고

13) E. Keen(2008), "Fighting corruption through education" 참조.

14) 미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했지만 종교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의 충돌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 도덕교육이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으로 부활되기는 하였지만 별도의 교과목을 통하기 보다는 여러 교과목 속에 필요한 주제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설명은 미국 도덕교육의 간략한 역사를 설명한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education.stateuniversity.com/pages/2246/Moral-Education.html>

있는데, 이 중에서 정의 부분이 반부패와 관련이 있다. 정의 영역에는 다시 하위 영역에서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인간 존엄성과 인권’, ‘사회 정의와 도덕’,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이런 주제들은 모두 반부패 교육과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패 교육을 담고 있는 수업 내용은 사회정의 부분이다. ‘사회 정의와 도덕’의 설명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3 주제가 있다.

- ①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 ② 부패 행위, 왜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 ③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를 개발할 때 이 세 주제에 요구하는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사회관계 속에서의 공정성 차원에서 사회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는 개개인의 삶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부패 행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다양한 양상을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학교 교육 중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는 중학교의 교과목인 도덕과목에 반부패 교육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은 반부패 교육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업적이라 생각된다.

고등학교의 윤리 교과목에서 더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반부패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반부패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대학에서 반부패 교육

초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수해야할 국민공통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민공통 교육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성권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가 가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물론 이 경우에 국가와 정권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은 개인들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른다. 대학 교육은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교과목이

1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P 29에서 인용.

나 전공은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반부패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은 대부분 가정이나 연령이 낮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치나 태도교육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은 시간이 감에 바뀐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대두하고 있다.¹⁶⁾

대학교수는 지식전달이 중요한 목적이지 학생의 가치관 형성이나 인격형성(formation of character)이 아니라는 주장과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이야말로 올바른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수도 대학생들의 인격형성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보수와 진보의 대립 면에서 보면 가치관 교육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전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치교육은 보수적인 가치를 전달하게 되어 대학에서 가치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들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궁극적인 목적이 인격완성이라는 면을 생각한다면 대학에서도 가치교육 역시 진보든 보수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학에서 반부패 교육이나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은 국제사회에서 과거부터 있어왔다.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유엔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유엔의 기구이다. 글로벌 콤팩트는 책임있는 경영교육의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PRME)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성공의 기준은 항상 윤리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여 성공적인 업적이 망가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상황에서 윤리적인 경영을 교육하는 것을 필수적인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 경영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윤리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반부패 행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¹⁷⁾

책임경영 교육을 위한 원칙 10개 교육 모듈

- (1) 핵심개념(Core Concepts): 윤리적 갈등상황의 인식, 사회적 책임, 의사결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 (2) 경제학 시장실패 그리고 직업적 갈등(Economics, Market Failure and Professional Dilemmas): 경제학과 여러 상황에서 시장실패, 시장실패가 부패와 연결되는 양상
- (3) 입법. 법에 의한 지배, 성실한 관리자 의무(Legislation, Control by Law, Agency and Fiduciary Duty): 선물, 이해상충, 이면거래 등
- (4) 왜 부패나? 행동과학(Why Corruption, Behavioral Science): 생산성향상과 청렴한 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의 설계,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

16) Schwartz(2000) 참조.

17)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의해서 반부패 경영교육의 연구와 실행을 위한 집행 단체로 2007년 만들어진 책임경영원리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unprme.org/resource-docs/comprehensiveanticorruptionguidelinesforcurriculumchange.pdf>

- (5) 선물, 이면계약, 이해상충(Gifts, Side Deals and Conflicts of Interest): 거짓말과 불투명성
- (6) 국제기준과 공급체인의 문제(International Standards and Supply Chain Issues): 국제기준과 현지기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최적 공급체인
- (7) 반부패 문제의 관리(Managing Anti-Corruption Issues): 국제적 여건과 현지 여건을 고려한 반부패 제도 개발
- (8) 부패방지를 위한 기능부서와 집단적 역할(Functional Department and Collective Action Roles in Combating Corruption): 해당부서들과 전담부서가 부패 방지 대책을 .
- (9) 진실, 공개, 배부고발, 충성도(Truth and Disclosure, Whistleblowing and Loyalty): 내부고발 시스템의 구축과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 (10) 글로벌 반부패 준수 제도 개발(Developing Global Anticorruption Compliance Regime): 유엔이나 여러 국제 기구들이 개발한 반부패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유엔이나 OECD가 주도하는 반부패 교육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기업경영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반부패 정의는 ‘공직(public power)의 사적인 사용’ 즉 공무원의 부패 행위인데 비해서 국제 투명성 기구는 ‘위탁된 직위(entrusted power)의 사적인 사용’ 으로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과 주주의 위임을 받은 기업가나 기업의 부패 행위도 반부패 교육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윤리경영이나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반윤리적이거나 부패하면 기업의 업적은 물거품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II. 반부패 교육의 원리

1. 교육과 행동 변화

모든 교육은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들의 행동변화라 할 수 있다. 시민교육도 정치법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하여 사려깊은 시민 책임 있는 시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교육과 같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목표를 가진 교육도 있고 단기적인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들도 있다. 금연 교육¹⁸⁾, 다이어트나 건강 교육¹⁹⁾, 환경 교육²⁰⁾, 소비자 교육²¹⁾ 등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을 통하여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육과 달리 환경교육이나 건강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며 한정적이고 또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부패 교육은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교육의 속성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서 태도 변화를 의도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18) Koning, et.al(2010) 참조.

19) Margolis(2013) 참조.

20) Pooley and O'Connor(2000) 참조.

21) Bloom(1976) 참조.

교육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블랙박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한 행동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들도 매우 다양한데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사람들의 행동변화는 교육과 학습자의 내면적인 요인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사람들의 태도나 신념의 변화가 행동변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증진 교육에 자주 사용되는 범이론모형(transtheoretical model)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²²⁾

교육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원리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하여 현상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높아지면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교육(education) ⇒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 ⇒ 가치와 태도(value and attitude) ⇒ 행동(action)

반부패 교육에 적용해 보면 반부패 교육을 통하여 부패의 개념, 원인과 결과, 그리고 부패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awareness)을 높일 수 있다. 교육학적인 개념인 지식과 이해가 인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다. 그러나 지식이나 이해가 곧 사람들의 가치나 태도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한편 가치나 태도가 함양되었다고 하더라도 곧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즉 환경교육에서 이런바 가치와 행동의 괴리(value-action gap)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의 연구자들은 반부패 교육이 지식을 제공하여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치나 태도가 형성되어 있으면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반부패 활동에 성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쪽에서는 일반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는 행동변화에 이르지 않지만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행동변화의 기본적인 원리는 개인의 선택은 적절한 유인(incentive)에 반응하는 것이고 유인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런 요인

22) 교육을 통한 행동변화에 관한 간단한 이론적 개관은 월드뱅크의 사이트 리소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GOVACC/Resources/BehaviorChangeweb.pdf>

들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유인으로 작용한다.

2.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반부패 교육

경제학에서는 부패 행위를 부패한 공무원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본다. 부패나 범죄도 다른 경제행위와 동일하게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패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데 편익이 클수록 또 비용이 적을수록 부패의 회수나 크기가 더 증가할 것이다.

부패행위에 따른 편익과 비용은 보통의 수요공급곡선과 같은 모양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²³⁾

부패행위를 할 때 생기는 편익은 부패의 단위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효용이나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편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부패행위의 편익은 주로 금전적인 비용이 될 것이고 일부는 자기과시와 같이 비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옳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금액이라도 그 금액에서 느낄 수 있는 효용은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주는 효용보다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범죄의 경제적 분석에서 범죄자에게 범죄의 비용은 범죄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확률(probability of punishment)과 처벌의 엄중함(severity of punishment)에 의해서 결정된다. 발각확률이 높고 처벌의 강도가 강할수록 범죄자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부패행위를 자주 저지르거나 부패의 규모가 클수록 발각 확률이나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범죄의 비용은 보통의 비용곡선처럼 우상향하는 모양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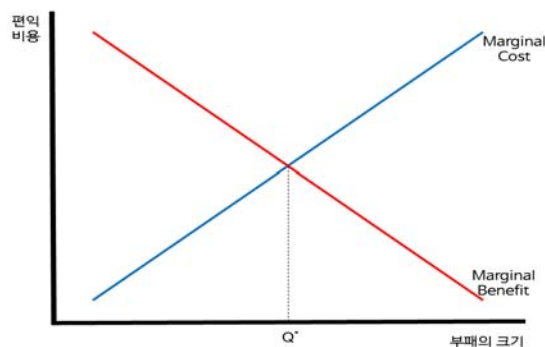


그림 1. 부패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개인의 선택의 결과

23) 부패나 범죄행위의 합리적 선택과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은 Carnis(2004)와 Dau-Schmidt(1990)를 참조할 것.

부패도 여타의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부패 행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부패행위가 Q^*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반부패 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패의 편익과 비용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교육 방향은 부패의 편익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도덕적 설득이나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교육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패 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치를 낮출 수 있다.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라도 부패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도덕적 효능감(moral efficacy)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만족감을 줄 수밖에 없다.²⁴⁾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부패의 편익을 줄인다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 행위의 편익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부패는 Q^* 에서 Q^1 으로 감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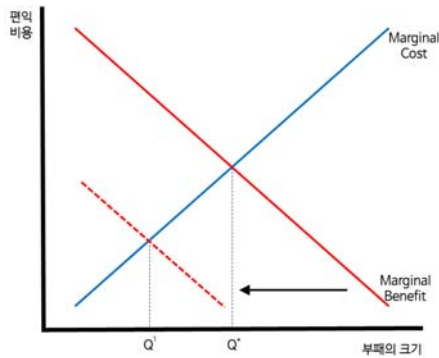


그림 2. 교육을 통하여 부패의 편익을 낮추어서 부패를 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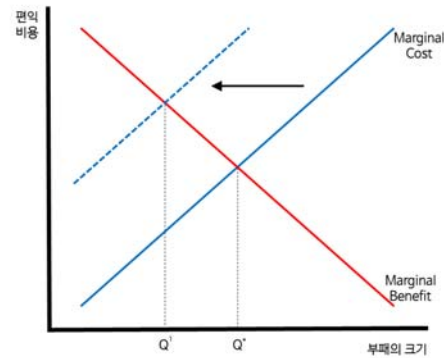


그림 3. 교육을 통하여 부패의 비용을 높여서 부패를 줄임

둘째 반부패 교육은 부패 행위에 따른 처벌 가능성과 처벌의 강도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충분한 정보의 부재(information limitation), 인식능력의 한계(cognitive limitation) 그리고 의사결정시간의 제한(time limitation)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은 제한을 받게 된다.²⁵⁾ 따라서 반부패 교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합리성을 보완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행위는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각보다는 발각될 확률이 훨씬 높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의 강도도 훨씬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24) 교육을 통한 내면적 만족감이나 도덕적 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May, et. al(2009) 참조.

25) 사이먼(H. Simon)이 제안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최적의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 논의는 Jones(1999) 논문을 참조.

야 할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면 부패는 Q^* 에서 Q^1 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과 같이 부패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물을 받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인 행위자의 부패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반부패 수단으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반부패 교육은 크게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통한 교육의 형식을 가질 수 있다.

교과 속에서 있는 반부패 교육은 사회과에서 정치현상 법의 지배와 같은 단원에서 정부의 기능과 원리 그리고 법의 준수에 관련하여 반부패 행위를 설명하고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한편 도덕이나 윤리 교과에서는 정의(justice)나 정직(honesty)과 같은 사회적 가치나 개인적 가치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부패는 정의롭지 않고 정직이라는 개인의 덕목을 해치는 행위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사회과나 시민교육 그리고 도덕과 윤리교육 속에서 일어나는 부패 교육은 맥락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호소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부패 교육은 특화된 교육을 통하여 부패행위에 대하여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패행위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의 부패 방지 대책이나 부패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근시안적 의사결정(myopic decision)이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부패행위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패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 하거나 희미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부패 교육은 개인이 생각하는 부패의 비용이나 편익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거나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패 적발 가능성은 개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높고 또 처벌도 강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동원하면 과거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계좌추적, 통화추적, 위치추적을 통하면 거의 모든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 부패를 저지를 위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진보에 따라 부패행위의 비용이 개인이 짐작하는 것보다 크다는 점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부패의 편익이 크지 않다는 교육은 부패로 인한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인 서비

스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돈에서 나오는 효용이 낮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가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즉 법의 준수, 정직, 청렴과 같은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면 동일한 액수의 돈이라도 정당하지 못한 돈에서 느끼는 효용은 훨씬 낮아진다. 따라서 공무원의 반부패 교육에서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여 부패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이나 다이어트 교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식과 행동의 상관관계가 낮은 이른바 가치-행위 괴리(value-action gap)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 방법 개선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 막연하게 부패는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가 부패가 된다는지 쉽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패 행위를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부패교육에서 토론식 교육이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언한 부패행위를 스스로 저지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Carnis, PL.(2004), “Pitfalls of the Classical School of Crime” - Ludwig von Mises Institute, https://mises.org/journals/qjae/pdf/qjae7_4_2.pdf
- Carpenter, James J. (2006) “The Development of a More Intelligent Citizenship” : John Dewey and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Culture: Vol. 22: Iss. 2, Article 5. Available at: <http://docs.lib.purdue.edu/eandc/vol22/iss2/art5>
- Cole, M. and Cole S.R. (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Dau-Schmidt, K(1990), “An Economic Analysis of Criminal Law as a Preference-Shaping Policy” , Duke Law Journal, 1990. Feb. no 1.;1-38.
- Jones, B.(1999), “Bounded Rationality” ,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999. 2. 297-321.
- Huberts, L.(1998). “What Can Be Done Against Public Corruption and Fraud. Expert Views on Strategies to Protect Public Integrity. Crime, Law and Social Change, 209-224.
- Keen, E.(2000), “Fighting Corruption through Education” HREA, <http://www.hrea.org/pubs/keen2000.pdf>.
- Koning, P., D. Webbink and N. Martin(2010), “The Effect of Education on Smoking Behavior: New Evidence from Smoking Durations of a Sample of Twins” , Discussion Paper No. 4796. IZA.
- Margolis, R(2013), “ Educational Differences in Healthy behavior changes and adherence among middle aged Americans” , Journal of Health and Behavior XX(X) 1-16.
- Marquette, H.(2007), “Civic education for combating corruption: lessons from Hong Kong and the US for donor-funded programmes in poor countries” ,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7, 239-249.
- Marquette, H. and D. Mineshima(2002), “Civ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lessons for the UK.” Parliamentary Affairs 55: 539-555.
- May, D. M. Luth, and C. Schwoerer(2009), “The Effects of Business Ethics Education on Moral Efficacy, Moral Meaningfulness, and Moral Courage: A Quasi-Experimental Study.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Proceedings. 1-6.
- McCusker, R(2006), “Review of anti-corruption strategies” , <http://www.aic.gov.au/documents/8/F/1/%7B8F179E8B-B998-4761-84B3-AD311D7D3EA8%7Dtp023.pdf>.
- Bloom, P(1976) ,”How Will Consumer Education Affect Consumer Behavior?”, in NA -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3, 208-212.

Pooley, J. and M. O'Connor(2000),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ttitudes: Emotions and Beliefs are What is Needed" , Environment and Behavior 2000, 32: 711.

투고일자 : 2014. 12. 04

수정일자 : 2014. 12. 12

게재일자 : 2014. 12. 31

국문 요약

반부패 교육에 대한 고찰

김 진 영(강원대학교)

부패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소지의 제거 그리고 부패방지 교육이 중요하다. 이 중에서 반부패 교육은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서 일찍부터 유엔, 세계은행, OECD 등이 반부패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먼저, 반부패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반부패 교육이 학교의 사회과나 시민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라는 사실들을 밝힌다. 그리고 반부패 교육의 원리는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부패의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부패행위의 비용이나 편익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부패 교육은 이런 제한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반부패 교육, 시민성, 행동변화, 부패 편익, 부패 비용